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직제개편을 위한 시안연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최 정 태

목 차

- | | |
|----------------------|-----------------------|
| I. 문제의 접근 | III.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직제개편시안 |
| II. 최근에 논의 또는 개편된 직제 | IV. 요약 및 전제조건 |

I. 문제의 접근

국립 부산대학교는 1996년 개교 50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후 국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대학의 설립이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가 항도부산에서 제일 먼저 설립되고 같은해 8월 22일 서울대학교가, 9월에 경북대학교가 이어서 설립되었다.(국립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이보다 6년후인 1952년에 각각 설립되었다.<1994년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각대학 자체평가연구보고서>참조).

부산대학교는 반세기의 창립역사를 가지고 국립대학으로서 제일 먼저 태어나 한국 제2의 도시에서 중심대학으로 위치를 지키면서 그 전통성이나 상징성이 지방국립대학의 표본처럼 되어왔다. 따라서 대학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기대 속에서 국립대학교의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현재 사회일각에서 불어오는 세계화, 국제화의 바람은 대학도 예외없이 무한경쟁의 대열에 놓여져 여기서 낙오되면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제는 기존의 명성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 부산대학교는 대학의 무리 속에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변혁을 꾀하여 새롭게 나설 것인가를 신속히 판단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이 변하고 새롭게 달라져

야 한다면 어느곳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문의를 제기한다면 나는 서슴 없이 "도서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다시 "도서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도서관 봉사의 패러다임이 변해야하고 봉사의 질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의 조직체계부터 다시 검토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어떤 조직사회에서나 그렇듯이 직제와 인사(사람)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요소가 되어 사람을 어떻게 유효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사황이 좌우된다.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듯이 국립대학도서관 설치 반세기동안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람(사서)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제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자구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며, 한편으로 남의 힘을 빌려 관계당국에 수없이 진정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진전이나 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문제는 남이 아닌 사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은 김정근 교수의 저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국립부산대학교 도서관만이 가진 단독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일개 대학이 혼자 풀어야 할 숙제도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1963년 2월 8일 부산대학교를 비롯하여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6개 종합대학교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를 설립하였다. (그후 본 협의회에서 파생된 협의체로 1990년 12월 11일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서울대학교도서관에 발족되었고, 본회는 1992년 서울시립대학교도서관이 참여함으로써 이후부터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협의회」로 칭함)

이와같이 전국에 산재한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이 모여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상호협력을 유지하며 업무의 개선점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을 제안, 건의하는 등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 당초 6개교로 시작한 것이 1995년 현재 회원교 도서관은 모두 46개교에 이른다.

본 기구는 공동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매년 1-2회의 총회와 실무자 세미나를 갖는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주요 일거리를 설정하

고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을 통해 도서관발전방안 등을 토의하여 해마다 발행하는 「國立大學圖書館報」(제1집(1982)-제13집(1995))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협의회가 주최하여 개최한 총회는 1995년 현재 모두 47차례에 이른다. 여기에서 제기되어 토론과정을 거쳐 채택된 내용을 자체평가한 후 자력으로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교육부, 총무처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개선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중 특히 직제문제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표-1>과 같다.

건의하는 안건은 매우 다양하고, 상정되는 내용은 해마다 특색이 있지만 제1차 총회(1963.2.8)에서 제47차 총회(1995.7.13-14)에 이르는 32년동안 단 한차례도 도외시 되거나 누락된 적이 없었던 주제(issue)가 바로 「도서관의 직제」의 문제이다. (<표-1>참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 도서관의 직제문제는 도서관에서 가장 본질적 문제(essential problem)이고 중차대한 요소(hot issue)임을 증명하고, 사서직의 직제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예시하는 것이며 둘째, 도서관의 숙원인 직제문제가 대학설립 50년, 협의회발족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는 곧 정책당국의 무성의와 도서관 경시사상을 실증(實證)했다는 것이며, 셋째, 이와같이 사회의 무관심과 당국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철시켜보겠다고 하는 집요하고도 끈질긴 사서정신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자료를 통하여 필자가 얻은 결론은 도서관 직제문제는 국립대학교도서관 발전에 사활이 걸린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도서관 살리기'에 중심기둥이 되어 이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의 추진과정에서 문제되는 제도과 법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걸림돌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주요과제로 노출된다.

궁극적으로 국립대학교도서관은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서 운영된다. 때문에 국립학교 속성상 어느 한 대학이 독단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않다. 간혹 어느 대학에서 총장과 도서관장의 의지로 일시적인 개편은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규에 벗어나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어서 총장이나 도서관장이 경질될 경우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표-1〉 도서관직제와 관련된 국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총회 토의 및 건의사항

총회차순	일 자	개최장소	참가인원	토의 및 건의요지
제 1차	1963. 2. 8.	도협사무국	-	· 사서직 직제 확립
제 2차	1963. 3.30.	경 북 대	9	· 대학도서관의 직제 확립
제 3차	1964. 3.28-29.	전 남 대	13	· 국립대학교 도서관 직제 확립
제 4차	1964.10.16.	부 산 대	14	· 대학도서관 직제 확립
제 5차	1965. 4.17-18.	서 울 대	16	· 대학도서관 직제
제 6차	1965.11.6-7.	서 울 대	13	· 직제 확립과 사서직 증원
제 7차	1966.	전 북 대	-	· 도서관 직제
제 8차	1967. 5.27-28.	충 남 대	12	· 도서관 직제
제 9차	1968.12.19-20.	경 북 대	13	· 도서관 직제, · 사서직 채용권 문제
제10차	1969. 8.18.	부 산 대	11	· 도서관 직제
제11차	1970. 8.28.	전 남 대	11	· 도서관 직제
제12차	1971. 6.11.	충 남 대	14	· 사서직 증원
제13차	1971.11. 4.	전 북 대	13	· 도서관 직제
제14차	1972. 4.28.	서 울 대	14	· 국립대학도서관의 직제 확립 · 도서관장 처우개선
제15차	1972.12.20.	경 북 대	16	· 대학도서관의 직제 확립 및 직급조정
제16차	1973. 6.15.	부 산 대	19	· 도서관의 직제 확립 및 직급조정
제17차	1973.11.16-17.	제 주 대	16	· 도서관 직제 확립
제18차	1974. 5. 3.	강 원 대	21	· 지방종합대학교 도서관 직제 확립
제19차	1974.10.18.	충 북 대	20	· 도서관 직제 확립 · 사서장 제도
제20차	1975. 5. 9.	전 남 대	23	· 대학도서관 직제 개편 · 대학도서관 지위 향상
제21차	1975.10.10.	경 상 대	20	· 직제 개편
제22차	1976. 5.17.	부 산 대	18	· 국립대학도서관 직제
제23차	1976.10.22.	전 북 대	23	· 대학도서관 직제 개편
제24차	1977. 5.13.	충 남 대	21	· 도서관장 지위 향상
제25차	1977.10.28.	경 북 대	19	· 도서관 직제 개편 · 도서관장 지위 향상
제26차	1978. 4.28-29.	서 울 대	27	· 국립대학 도서관 직제 개편 · 도서관장 지위 향상 · 도서관장의 임기
제27차	1978.10.12-13.	강 원 대	20	· 도서관 직제 개편 · 도서관장 지위 향상
제28차	1979. 5.25-26.	충 북 대	34	· 지방종합대학의 직제 개편 · 사서직의 직급 조정 · 도서관행정의 자율성 확보
제29차	1980. 9.19-20.	부 산 대	43	· 국립대학도서관 운영 개선 * 주해발표: 대학도서관 업무의 전산화

총회차순	일 자	개최장소	참가인원	토의 및 건의요지
제32차	1982. 6.18-19.	충 남 대	44	· 국립대학교도서관 운영개선 방안 재도의 후 보완 건의 · 도서관 업무 전산화, 서식의 표준화
제33차	1982.11.26-27.	전 남 대	41	· 도서관업무의 전산화, 서식의 표준화 동 건의안 추진 * 1982.12.31. 「국립학교설치령」개정으로 국립 대학교 도서관에 「정리과」 신설됨
제34차	1983. 7. 1-2.	부산수산대	52	· 도서관업무의 표준화, 전산화 · 서울대 도서관 직제 개정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건의하던 것을 보완하여 다시 건의
제35차	1983.11.25-26.	공주 사대	52	· 위 건의 사항을 재차 건의
제36차	1984. 6.29-30.	강릉 대	52	· 도서관 전산화 업무 지원 · 서울대 도서관 직제 개정 요구하였으나 성과 없음
제37차	1985.11.15-16.	목포 대	58	· 도서관 전산화 활성화 방안 · 사서직 증원
제38차	1986. 8.22-23.	한국해양대	56	· 사서직 증원 및 사서직 수당 지급
제39차	1987. 8.21-22.	군산 대	64	· 사서직 증원 및 전산직 배치
제40차	1988. 8. 5-6.	창원 대	72	· 도서관 직제 개편 · 전산직 배치 및 사서직 증원
제41차	1989. 7. 8-9.	안동 대	74	· 사서직군 신설 및 직제 개편 · 전산직 배치
제42차	1990. 8.13-14.	한국교원대	68	· 사서직군 신설 및 직제 개편 · 전산직 배치 · 국립단과대학에도 사서과 설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제43차	1991. 7.19-20.	순천 대	78	· 직제 개편 및 전문직 보장 · 서무과 및 전산실 설치 ·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지위- 학장예우 · 종합대학교에 부관장 제도 설치
제44차	1992. 7.10-11.	서울시립대	86	* 서울대학교 직제 개편(서울대학교 설치령개정(1992.3.6) :수서정리과, 도서관용과, 정보관리과, 서무과로 개편됨) · 종합대학교 도서관장 지위 향상 · 사서직 정원 증원 및 전산직 정원 배정 · 도서관장 직급 보장
제45차	1993. 7. 2-3.	전북 대	91	· 국립대학 도서관 직제 개정 ·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지위 향상 · 전산직 배정 및 정원 증원 * 교육부 직제 개정. 1994. 5. 16 : 교육부 대학정책실 내 학술정보과 신설됨

총회차수	일 자	개최장소	참가인원	토의 및 건의요지
제46차	1994. 7.15-16.	제주대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교 도서관 직제 개편과 도서관장에 우 상향 조정 · 전산직 도서관 배치 · 도서관 기능직의 전문화
제47차	1995. 7.13-14.	창원대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부속기관에서 총장직 속기관으로 개정 건의 · 전문직에 의한 부관장제 신설 · 수서과, 정리과를 서무과와 수서정리과로 개편 · 열람과를 자료운용과로 명칭 변경 · 전산직 정원 배정 건의

* 참고자료: 국립대학교도서관보 제 1-13집(1982-95) 및 제 47차 총회회의록(1995.10)

그동안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지방의 몇몇 대학이 소폭적인 직제의 개편과 과단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때로는 제도권 밖에서 실험적인 운영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일시적 방편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는 미봉책이었음이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는 대학도서관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장애요소는 무엇일까?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많은 국립대학의 족쇄이자 필요악으로 일컫는 「국립학교설치령」이다. 이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거나 규제의 완화가 있어야 한다. 우선 「서울대학교설치령」과 지방 국립대학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립학교설치령」의 차이는 엄청나다. 예컨대 위 2가지 령(令)의 적용사례를 본다면 서울대학교도서관장은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반해, 나머지 모든 국립대학은 대학안의 부속기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도서관발전의 걸림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국립대학은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서울대학교설치령」으로 운용되는 서울대학교, ② 이하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해 적용되는 종합대학교군(群), ③ 종전 단과대학의 규모를 가진 대학군과 산업 및 특수학교군, ④ 종전 2년제 교육대학에서 4년제로 전환된 교육대학교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대학들이 전국에 산재해있다. 이들은 모두 위치한 지역과 규모에 따라 대학의 특성이 다른데도 여기에 적용되는 국립학교설치령은 하나이어서 도서관은 아무런 특징없이 전국적으로 규격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당국이 지정해준대로 대학의 액세서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선진도서관을 지향하는 일부대학에서는 모법(母法)인 「국립학교설치령」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새로운 구도로 조직을 대폭 개편하였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또 어떤 대학은 개편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협의회가 주최한 창원대학교도서관에서 개최된 제 47차 총회(1995년 7월 13-14일)에서도 도서관 현안문제중 직제에다 비중을 두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지만 그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도서관 실무진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직제 문제는 도서관 실제업무와 관련되고 당장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십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국의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일부 국립대학교도서관에서 이미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는 직제와 개편예정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분석한 다음 현단계에서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현실적 바탕에서 부산대학교의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체제를 사서가 주도성을 가지고 외부의 지원없이도 창의적으로 연구도서관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고 이용을 극대화하며 봉사의 패턴을 선진형으로 재정립해 보자는 데 있다.

II. 최근에 논의 또는 개편된 직제

가. 국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개편안(1995년 교육부, 총무처 건의안)

1)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도서관장의 지위상향 조정

현재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에는 도서관은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로서, 학문의 생산적 토대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허점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대학도서관장도 외국의 선진 도서관과 같이 부총장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대학의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도서관이 학술정보센터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 예산, 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아 대학의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로 서울대학교도서관

관장은 대학의 부속기관이 아닌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 사립대학에 서도 이 제도가 추진중에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도서관도 부속기관이 아닌 총장 직속기관으로 되도록 설치령을 개정하고, 도서관장의 지위도 부총장급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2) 도서관내 전문직에 의한 부관장제 신설

현재 국·공립대학 도서관장은 교수에 의한 1-2년간의 단기간 보직으로 임명되고 있어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업무수행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장이 많다. 한 예로 최근 5년간 국립대학도서관장의 교체비율은 년평균 49.7%로서 1년 동안에 도서관장 절반이 교체되고 있음을 본다.(<표-2>참조)

<표-2> 최근 5년간 도서관장 교체 인원수 및 교체비율

기 간	회원 도서관 수	교체된 도서관장 수	교체된 비율
1990.8-91.5	31개	17인	54.8 %
1991.6-92.5	31	19	61.3 %
1992.6-93.5	41	21	51.2 %
1993.6-94.5	45	19	42.2 %
1994.6-95.4	45	20	44.4 %
평 균	(193)	(96)	49.7 %

* 참고자료: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9-13호(1991-1995)

원칙적으로 도서관장은 전문직사서에 의한 전담관장이 불박이로 도서관업무에 전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대학총장의 인식과 교수사회의 반발 등 현실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일부 사립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직 사서가 부관장의 직책으로 도서관장을 보좌하여 미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각 과장의 업무를 통괄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행정직군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사무관은 대체로 고학력과 많은 실무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 타직종과의 균형유지와 이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직사서에 의한 부관장제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관

장의 자격은 "사서서기관"으로 보하되 "1급정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서과와 정리과를 서무과와 수서정리과로 개편

국립학교 설치령 제 13조 ②항에는 전문적인 사서업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구입, 교환 및 등록업무를 일반행정직 과장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그 전문성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의 수서과와 정리과를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서무과는 일반행정직이 관장하고 도서관의 사서전문업무 이외의 일반서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그리고 수서정리과는 사서전문직이 관장하며 지금까지의 수서과 정리과의 분산된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토록 한다. 이는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4) 열람과를 자료운용과로 명칭변경

현대사회는 학술정보의 수록소재가 다양화되어 단순한 열람업무 뿐만아니라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CD-ROM, Disk, Floppy Disk, Map, Microfilm, Video Cassette Tape, Record Cassette Tape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또한 서지조사 및 서지자료의 작성과 최신정보의 온라인검색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과"라는 명칭이 부적합하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명칭을 "자료운용과"로 변경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5) 사서직 증원 및 보충 동결 해제

문민정부 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 및 보충이 수년간 동결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 와서 전산직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이미 해제가 된 상태이다. 이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기구나 인원의 축소에 있지 않고 업무의 능률에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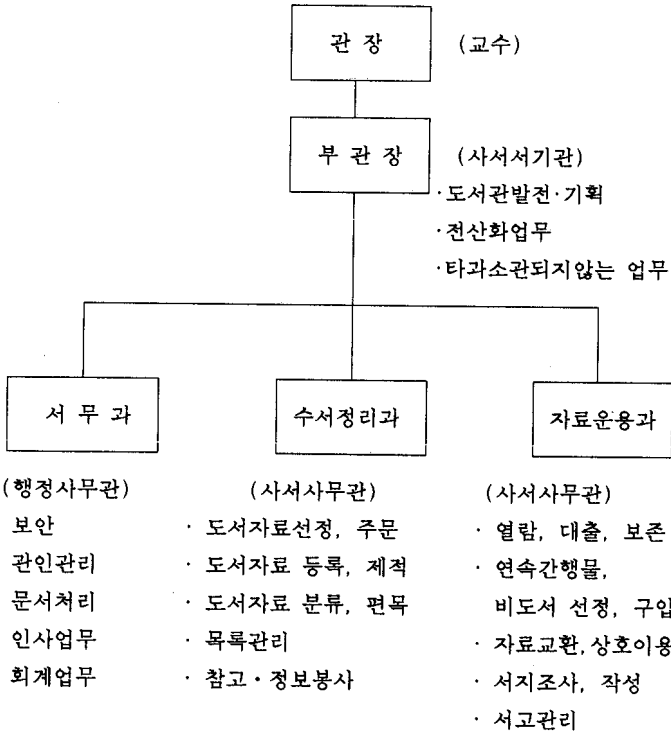
그러나 도서관은 사서의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양이 팽창함에 따라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의 사서직의 동결도 해제함이 마땅하고 그동안 결원된 인원이 조속히 보충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현재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에는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실제 많은 대학도서관은 사서사무관(5급)이 아닌 사서주사(6급)로 하향된 직급으로 충당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정상화를 위하여 하루 빨리 규정에 맞게 돌려주어야 한다.

6) 전산직 정원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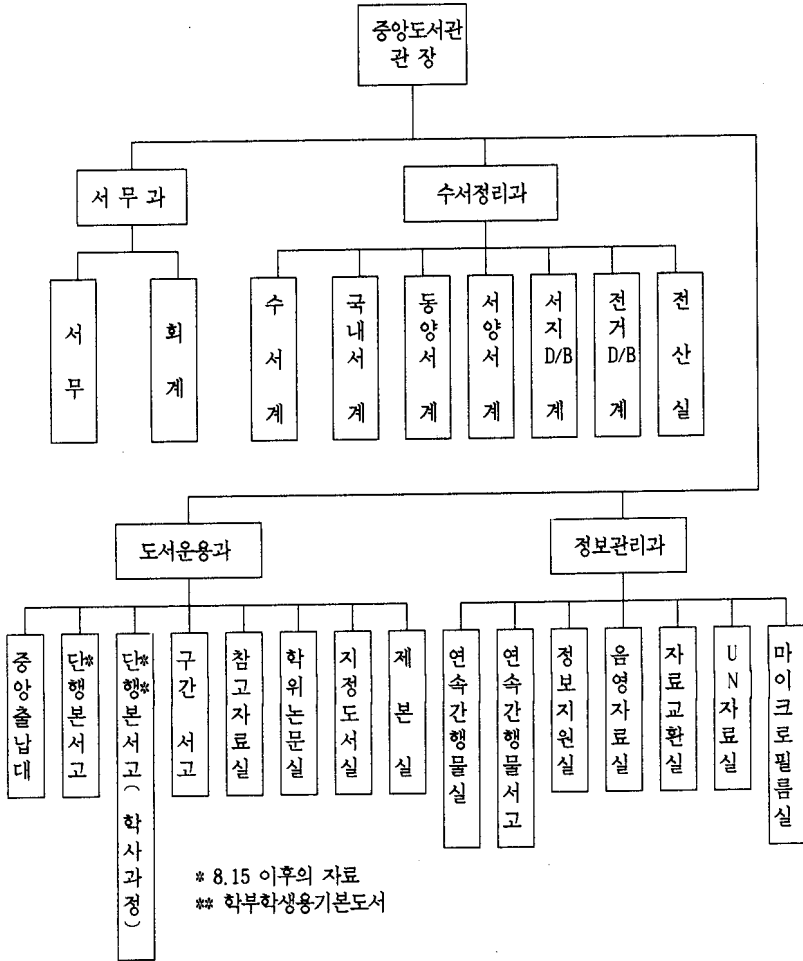
많은 대학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자체의 노력으로 전산업무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IBRD차관 또는 학교의 특별기금으로 확보되고 있는 H/W와 S/W의 선정 등으로 전산업무 추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서관에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전담 전산직원이 없는 실정이다. 간혹 도서관에 따라 1-2인의 임시직원 내지 조교가 대행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장기적인 전산계획이나 관리는 물론 현재 전산기기의 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규모에 따라 대학도서관 전산실에 2-3인의 전산직 인원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건의안을 기본으로하여 본 협의회가 마련한 개편안은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도서관직제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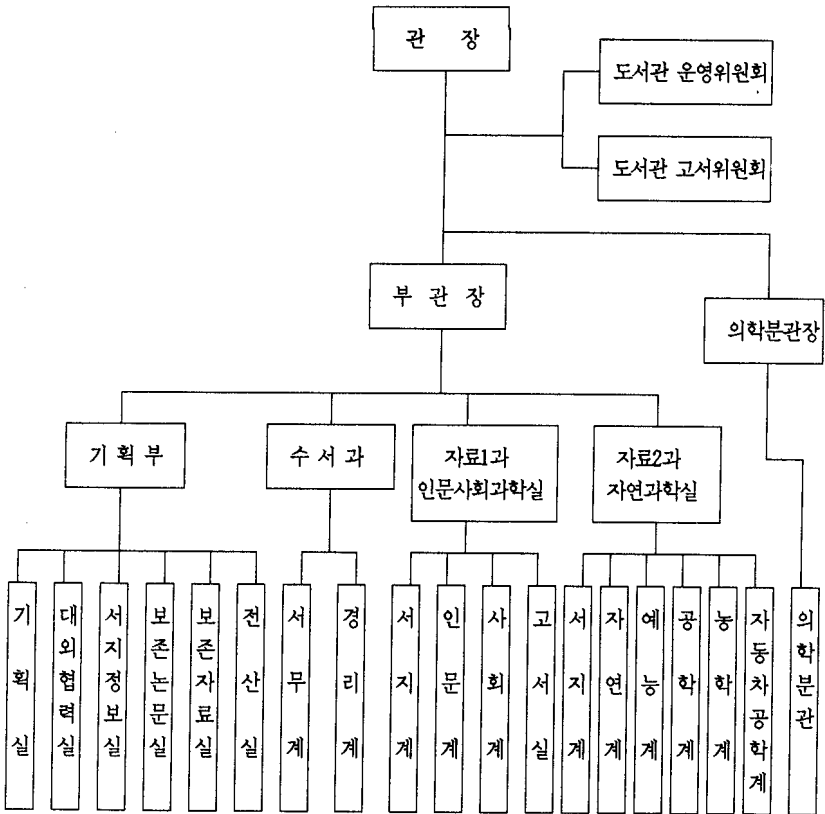
*이 직제개편안은 협의회의 회장교인 부산대학교도서관이 각회원교로부터 수집한 개편안을 가지고 몇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안은 종합국립대학교 규모의 수준에서 기초된 것이므로 그 이하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축소조정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서울대학교도서관 조직개편(1992.3.6)



* 이 조직개편은 서울대학교설치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다른 국립대학교도서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총장 직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종전에 도서관조직안에 있던 규장각이 총장의 부속기관으로 독립되었다. 그리고 도서관 분관으로 의학분관, 농학분관, 법학분관, 사회대 분관등이 소속대학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사서의 인사관리는 서울대학교규정(제18조)에 의하여 중앙도서관장이 지휘 감독하고 있다.

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조직개편(1995.3.8)*



* 이 조직은 자료를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주제중심의 봉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사서가 곧 도서관인 one-person-library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 초유의 기록으로 보인다.

장 점 : 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양질의 봉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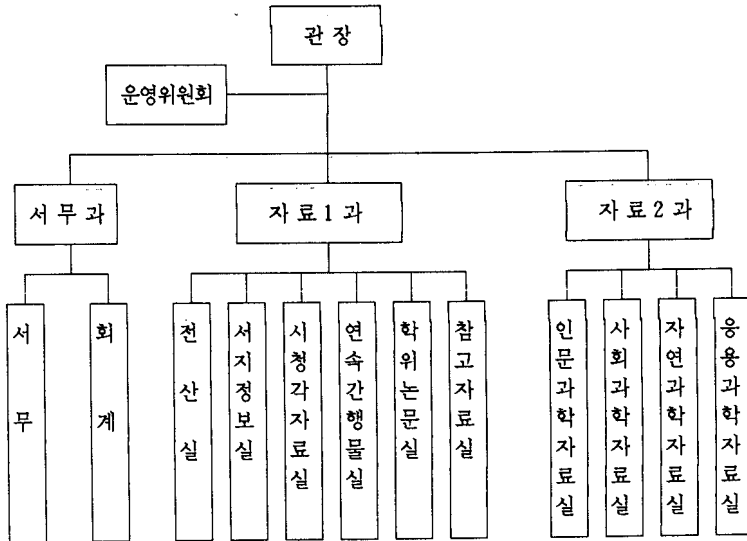
③ 담당사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문제점 : ① 현사서의 체제로서 무리가 많다.(사서의 능력 및 언어문제)

② 업무가 경직될 수 있고 조직의 상하조정이 어렵다.

③ 조직의 강점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개편의 성공여부가 미지수이다.

라. 경북대학교 도서관 조직개편안



*이 개편안은 전문직 관장과 실무진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 미완성이다.

1) 현행도서관 조직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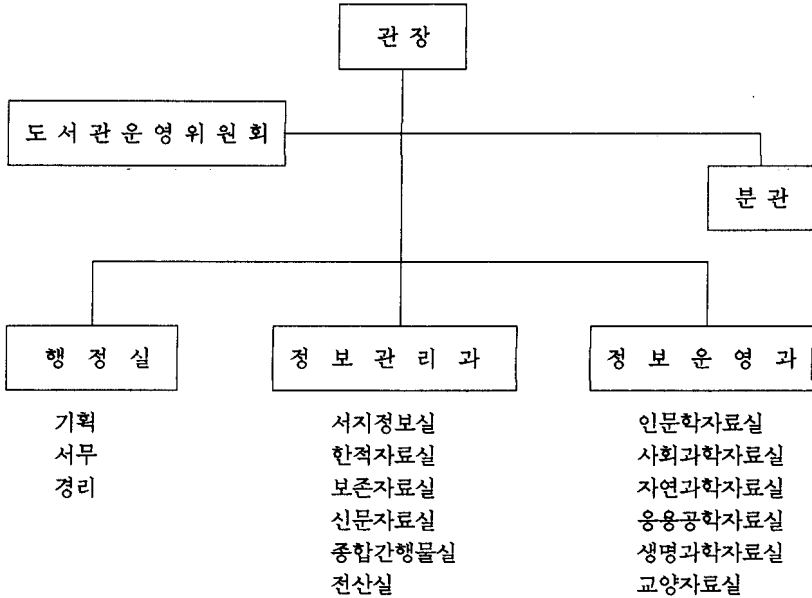
: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의 구분은 도서관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때의 기능중심의 부서설정으로, 현재의 기능 통합위주의 전산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개선안

: 현행 수서과 업무 중 회계 및 서무업무를 제외한 수서업무와 정리 업무 및 열람과 업무를 통합하여, 자료의 특성에 의한 업무 영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 ① 서무과 : 도서관 회계 및 서무업무
- ② 자료1과 : 정기간행물, 참고자료, 학위논문, 비도서자료의 수서, 정리, 열람, 전산 및 정보봉사업무
- ③ 자료2과: 단행본자료의 수서, 정리 및 열람

마. 경상대학교 도서관 조직개편안



* 이 개편안은 도서관 경영조직의 생산성과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이용 편의와 서비스 중심의 체제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서지정보실을 활성화하여 참고자료실의 학술정보를 포함한 각종 서지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일차적인 정보요구를 해결하는 기능과 CD-ROM검색, Dialog 등의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능을 일원화하여 집중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한 "서지정보실"을 구성하여 정보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한다.

문제점

- ① 정보관리과와 정보운영과의 명칭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 ② 자료의 조직업무(분류, 편목)를 분장하는 기구가 불분명하다.
- ③ 연속간행물의 관장기구가 없다.
- ④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요한다.

III.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직제개편 시안

부산대학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직제모형은 원칙적으로 국립대학교서관협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 모형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현재 부산대학교도서관이 협의회의 회장교로서 시안(試案)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안의 작성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진과 몇차례 토의과정을 거치고 부산대학교 도서관 중견사서들이 타대학교서관을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문헌정보학과와 연석 세미나를 통하여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건의안 중 직제개편의 기본내용은 <II장의 가>항과 같으나 개혁의 핵심은 다음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직사서에 의한 부관장제의 도입

이제 한국의 대학도서관도 선진국과 같이 전문직 사서에 의한 관장직이 부여되어야 하고, 전문경영인이 불박이직업(fixture)으로 장기간에 걸쳐 종일 지도, 관리해야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도서관은 대체로 비전공 교수가 1-2년의 보직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기한이 되면 미련없이 떠나고 만다. 도서관의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어찌 한두해의 경험으로 도서관을 말할 수 있으며, 50년간 쌓인 도서관의 문제를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이론과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직사서가 관장이 되어야 하지만 전초단계로서 우선 부관장이 되어 실무적인 업무를 장악하고 관장의 무지를 바로잡아 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도서관 살리기'인 것이다.

둘째,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

1953년 4월 20일(대통령령 780호) 최초로 제정된 국립학교설치령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2월 28일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4,539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의 50여 국립대학은 모두 이 율타리속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이 령은 도서관직제의 기본법으로서 대학의 크고작음, 특성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따라 주어야 한다. 그 중 국립학교설치령 제 13조는 도서관업무의 전문직업무인 수서업무를 도서관과 관련없는 일반행정직이 관장토록하고 있다. 이를 사서직이 맡도록 하자는 말은 30년동안 반복해온 요구인데 이것은 사서들의 권리회복운동으로 어찌면 그들의 당연한 권리일지 모른다. 또한 사서인력의 획기적인 보충이 매우 어려운 한국의 현실정에서 직제개편의 한 방법으로 현 수서과와 정리과를 서무과와

수서정리과로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열람과라는 명칭이 일체의 잔재로서 부적당하여 이름을 자료운영과로 바꾸자는 데도 설득력이 있다. 현행 국립학교설치령과 개정안의 내용은 <표-3>과 같다.

셋째, 사서직 보충동결해제와 전산직 배정

문민정부이후 일반공무원의 보충이 수년간 동결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대부분 전문직의 동결은 해제되고 있지만 사서직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붙고 있는 도서관 전산화바람은 기자재의 도입부터 서둔다. 이에 비해 이를 관리할 전산직원을 도서관에 배치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적으로 사람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왜 도서관에는 적정수의 사서가 유지되어야 하며, 왜 전산화가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밝힌 다음 전산화의 시기와 이해득실을 먼저 연구,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립대학도서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여기에서 일단 정리하고, 현재 부산대학교도서관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와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부터 논의코자 한다.

지금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연구도서관의 재조직(re-engineering)문제는 신속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제기된 도서관의 핵심과제이다. 이는 부산대학교의 교육개혁에도 부합하고 도서관봉사에 있어서 변화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며, 다른 국립대학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의 시금석이 되는 사안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은 1994년 9월 본교 캠퍼스내에 신속도서관을 새로 개관하므로서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의 2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아미동 의학캠퍼스의 의학분관은 별도) 이와같은 도서관의 2원화체제는 한국대학도서관 사상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이용자 그룹을 분산하여 교수 및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진에게 제공하는 자료중심도서관과 학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좌석 및 교양자료를 비치하는 좌석중심도서관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실험적 모형이다.

그러나 연구도서관이 개관된지 1년이 훨씬 지난후 아직까지도 부산대학교 교수 67.8%가 연구도서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거나 모른다고 하는 보고(유익봉·장정순, 부산대학교도서관 서비스개선에 관한 연구, 1996년 2월 9-10일, 제26차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가 있어서 현상태에서 연구도서관제도는 당초 의도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찌면 표류하고 있는지 모른다.

〈표-3〉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현행	개정
<p>제13조(도서관)①도서관에 수서과, 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을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완 2. 관인관수 3. 문서처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 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p>③ 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p>④ 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 	<p>제13조(도서관)①도서관에 부관장, 서무과, 수서정리과, 자료운용과를 두며, 부관장은 사서서기관으로 서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서정리과장, 자료운용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 부관장은 관장을 보좌하고 관장 유고시에 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관내 각 부서간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기획 및 발전업무 2. 도서관 전산화업무 3. 기타 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p>③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처리 4. 인사 5. 회계 <p>④ 수서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자료의 선정 및 구입 2. 도서자료의 등록 및 체적 3. 도서자료의 분류 및 편목 4. 목록관리 <p>⑤ 자료운용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 및 보존 2. 연속간행물 및 비도서자료의 선정, 구입, 관리 3. 도서관 자료의 교환 및 상호이용 4. 참고 및 정보봉사 5. 서지조사 및 작성 6. 서고의 관리 7. 도서관 이용안내

애초에 연구도서관을 구상한 것은 그 규모가 20,000㎡(약6,000평)이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연구도서관으로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기능면에서도 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상 2,000평 규모로 연구도서관이 일단 완성되었지만 이 규모로는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부산대학교의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의 규모와 재원을 비교해보면 금방 판명이 된다.

〈표-4〉 연구 및 학습도서관 자원비교

95년 12월 현재

	연구도서관	학습도서관
배치인원 (명)	37	16
실수 (실)	16	27
규모 (㎡)	6,637	10,536
소장책수 (책)	210,000	440,000
좌석수 (석)	200	2,843
'95 입관자수 (명)	132,385	532,802
'95대출건수 (건)	11,264	163,164

* 본 통계는 의학분관, 구과학분관 및 각과제도서관실 재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장책수는 어림수임.

〈표-4〉에 의하면 연구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즉 건물의 규모와 좌석수, 배치인원, 그리고 연간이용자 수 등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개 기관간의 심한 편차와 불균형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본다.

결론적으로 이를 다시 재편성하여 연구도서관의 기능을 회생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으로 도달하는 데는 부산대학교 사서진과 문헌정보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연석회의와 토론회에서 나온 집합된 의견의 결과이며, 동시에 조직의 개편을 가시화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안이 나오기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서A** : 도서관의 조직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학교설치령」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 사서B** : 우리도 C대학처럼 대학규정을 개정하면 독자적으로 개편이 가능하다.
- 교수A** : 도서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되 반드시 사서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 사서C** : 현 2,000평의 연구도서관을 각층별로 주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서D** : 우선 정리, 수서업무만 통합하고 열람업무는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
- 사서E** : 기획실을 신설하고 수서과는 서무과로 바꾸고, 정리과를 자료협력과로 하며 분류, 목록, 수서, 전산업무를 하게한다.
- 사서F** : 서무과, 자료조직과, 자료개발운용과로 구분한다. 서무과는 각종 행정업무와 주문, 접수업무를, 자료조직과는 등록업무와 정리업무를, 자료개발운용과는 장서개발업무와 기존의 열람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C** : 연구도서관을 층별로 주제화하여 1층에는 일반행정·수서·정리업무, 디지털 도서관(Digital Library), 2층에는 어문학관, 3층에는 인문·사회과학관, 4층에는 자연과학관으로 재비치한다.
- 교수B** : 도서관에 전문직 부관장제를 두어 여기에서 도서관실무를 지도하고 도서관발 전기획업무, 전산업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 사서G** : 부관장을 두고 서무과, 자료운용과(수서·정리과), 열람봉사과(이용자봉사과)로 한다.

IV. 요약 및 전제조건

이상과 같은 현장의 연구와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안전 등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직제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에 전문직 부관장제도는 필요하고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천되려면 대학총장 및 도서관장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현 공무원정원령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같이 혁신적인 제도개선은 부산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서관과 협의회가 공동으로 도서관 숙원사업으로 설정

하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2. 도서관에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의 3과체제를 그대로 두되, 과의 명칭을 서무과, 수서정리과, 자료운용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추가되는 비용이나 인원이 더 이상 불필요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여진다. 그러나 수서·정리과장의 사서직 보임은 행정직관료들의 저항이 예상될 수 있지만 도서관 권리회복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체대학의 규정만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총장과 도서관장의 개편의지가 문제이다.
3. 사서직 동결해제 및 전산직 배정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학의 교육개혁과 '군살빼기'에 맞물려 직제의 확장이나 공무원의 증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직제와 인원의 배정은 총무처 및 교육부의 소관이므로 대학총장의 적극성과 필요성이 확고해져야 하고 도서관의 특수성이 내외에 설득되어야 한다.
4. 부산대학교 연구도서관제도는 대학사상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대학경쟁의 수월성과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지름길이 되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4,000평 규모의 도서관이 조속히 증축되어야 한다. 우선 현 상황에서 연구도서관을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전폭적인 동의하에 조직을 개편하고 가장 유용한 공간활용방법을 모색하여 봉사의 패러다임과 질을 바꾸어야 한다.
5. 이 시점에서 외부의 큰 지원없이 가장 효용성이 있는 조직개편 방법은 연구도서관 전층을 주제화하여, 2, 3, 4층 각실마다 단행본, 참고도서, 학술잡지 등을 전문분야별로 통합하여 도서관 안에 또하나의 전문도서관을 만들어 이용자를 주제에 따라 분산하는 체제로 구축한다. 다만, 학습도서관은 학습 및 교양 자료를 수집, 종전대로 활용한다.
6. 연구도서관 1층에는 수서·정리업무와 정보안내실(Information desk) 및 디지털 라이브러리(Digital library)로 활용, 2층은 어문학 및 예체능자료, 3층은 인문, 사회과학자료, 4층은 자연과학자료를 각각 수장하고 주제별로 전문화하여 그룹단위(One-Person -Library 가 아님)로 전담사서가 분담하여 봉사한다.

7. 수서·정리업무를 주제별로 전문화하여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제도를 적용, 수서와 정리업무를 같은 선상(line)에서 수행토록한다.
8. 개편되는 자료운용과(종전 열람과)도 각층에서 기술봉사(technical service)팀과 같이 주제중심으로 운용하고 봉사한다.
9. 1994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되고 있는 「부산대학교도서관 자료구분기준」 작업계획은 새로운 조직체제안에 흡수한다.
10. 앞으로 본 시안은 1996년 전국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상정하여 사서진의 의견을 추가 반영토록 하고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상 10개의 제안사항을 다시 요약하면, ①-③항과 ④항의 도서관 증축문제는 현 위치에서 볼 때 획기적인 외부의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자체적으로 성취하기가 쉽지않다. 그러나 ⑤-⑨항은 현장사서의 참여의식과 기관장의 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갈림길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새삼스레 고칠 필요가 있나” 라든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망설인다면 도서관은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이대로는 안된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결심한다면, 도서관의 재조직을 주저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선행해야할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첫째, 부산대학교도서관 운영책임자인 관장과 관리상의 실무책임자인 각과장이 새로운 개편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에서 성패여부가 좌우된다. 개편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개편의 장단점을 추적하고 추진능력과 필요한 인력, 작업기간을 산정하여 실제직업팀을 구성, 일을 착수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과장 및 중견사서들이 도서관봉사에서 조우하는 이용자들의 무관심과 질타를 직시하고 자기직무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직업으로서 도서관현장을 개인적인 생활수단의 장소에서 벗어나 프로적 근성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와 실천력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연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재편성 대상자료로서 일반단행본, 연속간행물

그리고 참고자료(reference book)를 주제별로 다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지조사실, 정기간행물실, 고전자료실의 각자료는 내용을 보강하여 그대로 두고 종전대로 별도의 독립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재 연구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각 자료를 주제별로(어문학 및 예체능,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량을 조사한 후 구분작업을 하여야 한다.(복본수 및 목록의 수량 포함)

넷째, 4주제의 자료가 각실에 적절하게 비치될 수 있는지 각실마다 소장할 수 있는 장서의 량(holding collection)과 공간(capacity)의 크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가배열이나 공간처리를 신중히 대비하여야 한다.(특히 3층의 사회과학자료)

다섯째, 정보안내실과 디지털 라이브러리 운영은 현재 사서직의 인력부족과 업무처리의 능력부담으로 실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 대안으로 시간제 보조사서(assistant librarian)제도를 활용하든지, 문헌정보학과와 협력하여 고학년의 실습사서(internship librarian)를 여기에 투입하게되면 강단과 현장이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상호 도움이 된다.

여섯째, 학습도서관은 앞으로 대학의 학부제 추진에 발맞추어 가감없이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앞으로 개설예정인 「대학사자료실(University Archives)」과 확장예정인 「시청각자료실」은 장소이전문제를 좀더 검토키로 한다.

일곱째, 수서정리 업무의 통합원칙은 4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4가지 영역에 따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서를 인선하여 전문사서제로 팀을 조성하여 수서정리 업무를 겸임전담케한다. 여기에서 가능하다면 팀장(team leader)은 장서개발업무(collection development affairs)까지 담당하여 장서평가, 조정, 제적업무를 창의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수서업무 중 특히 주제와 무관한 수증자료의 취급과, 일괄구입을 원칙으로 하는 연속간행물의 취급은 잠정적으로 종전대로 전담사서가 계속 수행토록 한다.

아홉째, 직접봉사(public service)팀도 기술봉사팀과 같이 주제전문화하여 봉사에 손색이 없도록 하며, 일반단행본, 참고도서, 연속간행물의 통합된 자료를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에 의하여 무리없이 수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및 판내재교육과 세미나를 지속시켜야 한다.

후기: 이 논문은 제 26차 국공립대학교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1996.2.9-10: 부산대학교 인덕관)에서 특강자료로 발표한 것을 보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차례의 토의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신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동료교수와 대학원 공동작업실팀 그리고 부산대학교도서관 각 과장님과 이 일에 참여하신 여러 사서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